

인문계열 - 12월 19일(토) 오전

■ 문제

수도권의 면적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수도권의 국내 총생산은 전체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며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2017년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에서 6위에 오를 정도로 글로벌 자본이 집중되며 정보와 문화가 생산·전달되는 세계적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의 건설, 그리고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수도권 분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밝히시오.

■ 추가질문

○ 인구와 기능의 분산정책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대답한 경우

- 세종특별자치시와 공공기관이 건설되는 혁신도시로 이동하는 수도권 인구와 민간 조직의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분산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 불평등 해소와 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가?

○ 인구와 기능의 분산정책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경우

-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은 대도시의 인구 집중으로 더욱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과 복지를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은 분산되어야 하지 않는가?

2021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교수용)

인문계열 - 12월 19일(토) 오전

■ 예시 모범답안

<평가시 참고 사항>

지속 가능한 발전은 통합사회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임. 아래 표에 나와 있듯이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빈곤퇴치와 일자리, 그리고 생태계 수용 능력을 고려하는 경제 성장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구와 기능의 분산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을 자신의 논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지 살펴볼 필요 있음.

※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구성 요소 (특히 연관항목은 음영처리 하였음)

빈곤퇴치	기아퇴치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이용 가능한 청정 에너지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환경 보호에 대한 움직임
생태계 보호	평화와 정의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수자원 보호

- 인구와 기능의 분산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1) 수도권외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주택과 교통문제임. 수도권외의 인구 증가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한 불평등과 사회갈등의 증가는 사회통합의식 해체로 이어질 수 있어 분산정책의 시행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

2) 대기오염과 소음, 쓰레기 처리 문제와 같은 환경오염은 대도시 집중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생태계에 위협이 되며 환경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따라서 분산정책의 시행은 환경을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

3) 수도권외의 사회자원 및 고용의 집중은 지역의 인재들을 흡수하여 좋은 일자리의 집중화를 가져와 비수도권 지역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저해함. 또한 이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들은 점차 고령화 되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 따라서 인구와 기능을 분산하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곤을 퇴치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

인문계열 - 12월 19일(토) 오전

- 인구와 기능의 분산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1) 대한민국은 대외 교류 중심의 경제 구조를 통해 성장하고 있음. 따라서 인적자원의 집중과 자본의 집중적 투자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에 인구와 기능의 인위적 분산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함.

2)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문화와 재택근무 같은 생활양식이 확산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인구와 기능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됨. 지속 가능한 공동체에 필요한 조직형태 및 행위규범을 반영하는 발전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위적 분산정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함.

3) 수도권외 공공기관이 이전하더라도 이미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동하여 근무하게 되면 기존의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은 분산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려움. 따라서 인구와 기능이 분산되더라도 국가차원의 빈곤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추가질문 및 예시 모범답안

○ 인구와 기능의 분산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 세종특별자치시와 공공기관이 건설되는 혁신도시로 이동하는 수도권 인구와 민간 조직의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분산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 불평등 해소와 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가?

[답변]

사회기반시설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임. 공동체가 정착되기에는 교류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헌법 123조 2항에서 지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기능의 분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함.

○ 인구와 기능의 분산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인문계열 - 12월 19일(토) 오전

-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은 대도시의 인구 집중으로 더욱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과 복지를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도권외의 인구와 기능은 분산되어야 하지 않는가?

[답변]

대도시의 인구 집중은 팬데믹에 취약한 측면도 있으나 집중되어 있는 만큼 빠른 검진과 치료가 가능함. 또한 최근 요양병원의 경우와 같이, 지역적 차원의 인구 집중보다는 국지적 격리 상황에서 오히려 코로나19의 집단 확산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해본다면 인구와 기능의 분산은 팬데믹에 취약한 계층을 양산할 수 있음. 따라서 대도시 인구 집중이 반드시 팬데믹 현상의 확산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 및 복지시설이 집중된 대도시에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이 건강과 복지를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구현에 더 유리할 수 있음.

인문계열 - 12월 19일(토) 오후

■ 문제

인간이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법으로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50-299인 고용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50-299인 고용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강도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과의 형평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차별적 법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50-299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적용과 관련하여 정부와 중소기업의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유의사항: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와 고용주 간 합의와는 상관없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불법이 되어 고용주가 처벌받게 된다.)

■ 추가질문

1) 정부의 의견을 지지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임금 및 근로환경의 차이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중소기업에 적용할 경우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지 않은가?

2) 중소기업의 의견을 지지할 경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이 필요하지 않은가?

인문계열 - 12월 19일(토) 오후

■ 예시 모범답안

[정부의 의견을 지지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를 중소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경우

사회의 변화와 구성원들의 가치의 변화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일과 삶의 균형은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일은 많이 했던 반면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가족생활과 여가, 그리고 자기발전을 위한 투자는 등한시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생활수준 및 사회적 가치가 변화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더 적은 근로시간과 더 긴 휴가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의 정착을 통해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여타 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경제와 중소기업의 발전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여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첫째, 개인의 삶의 질의 개선과 함께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더 계발할 수 있으며, 가족과의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어 여러 사회문제(예를 들면 가족의 해체 등)를 개선할 수도 있다.

둘째, 일자리 증대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을 진흥시키는 효과도 동시에 나타난다. 레저 산업과 주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산업들이(레포츠, 헬스 등) 성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또 다른 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이 일어날 수 있다.

인문계열 - 12월 19일(토) 오후

셋째,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업무의욕 상승과 근무 집중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의견을 지지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적용 완화 입장’을 지지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매우 크며,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물론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주 52시간 근무제’는 대기업의 지위를 더 강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지위를 더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COVID-19로 중소기업들이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추진은 중소기업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몇 시간을 근무할 것인가를 기업과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로 규정해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50-299인 고용사업장에 미칠 부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 임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이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고용의 부담도 가중된다.

둘째, 중소기업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임금수준이 아직 낮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다.

셋째, 고객에게 정해진 시간을 맞춰야 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인문계열 - 12월 19일(토) 오후

■ 추가질문 및 예시 모범답안

1) 정부의 의견을 지지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임금 및 근로환경의 차이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중소기업에 적용할 경우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지 않은가?

[예시 모범답안]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여러 면에서 불리하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숙련된 양질의 인력은 지속적으로 대기업으로 이동하려는 현상이 발생하여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함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연구개발지원, 설비비용 저금리 대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중소기업 노동자 교육훈련비 지원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스스로도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의 향상, 경영효율성 향상 등 여러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중소기업의 의견을 지지할 경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이 필요하지 않은가?

[예시 모범답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연간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이 제도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

2021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교수용)

인문계열 - 12월 19일(토) 오후

여기서 50-299인 고용사업장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폐지 혹은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적용 강도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폐지나 적용거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겠지만 제도의 적용완화는 충분히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우 아직은 다수의 기업들이 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고, 중소기업들이 당장에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 제도를 너무 서둘러서 정착시키겠다는 성급함을 가지고 접근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